

법사위, 野 주도 ‘민생회복지원금·노란봉투법’ 본회의 회부

與 “민생회복지원금, 헌법 체제 반해”
표결 강행에 반발하며 기권 던져
정청래 “의사결정 방법, 다수결”
검사 탄핵소추안도 표결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31일 야당 주도로 쟁점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표결돼 본회의로 넘어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안전처리 및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안전을 처리하자는 여당의 요청에도 안전 토론 종결 동의를 건을 표결해 처리했다.

광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명백하게 헌법 체제에 반한다”며 “재정 권한은 헌법상 정부와 국회에 나눠져 있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고, 국회는 심의 확정하는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3조원 현금 살포법에선 지급대상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 예산 편성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하자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와 의원들이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 법 자체로 확정되는 효과를 갖는다”며 “처분적 법률로 불리우는데, 우리나라 체제와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철길처럼 만나지 않는 곳으로 계속 가다보면 식물 국가나 비생산물 국가가 되기 때문에 다수결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 49조에서 의사결정 방법을 다수결로 정했기 때문에,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려고 한다”면서 “압

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몰아주신 국민이 희망하는 대로 야당을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반발에도 정 위원장은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도 표결해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고 정 위원장 의장석을 둘러싸며 항의했으나 표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불참하진 않았으나 안전 표결에 기권 의사를 던졌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으로 전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내수 진작을 도모하는 법률안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불법헌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부르며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또,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이 발의한 4명의 검사 탄핵안 중 하나다. 김영철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해당 탄핵소추안에 대한 근거로 언론보다 4건이 제시된 것을 두고 “탄핵에 대한 무게감이 22대 국회 들어서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허접하게 언론보다 4개 붙여놓고 탄핵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에 대한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 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이 법사위에서 모두 처리되면서, 오는 14일 법사위에서 이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대표 임면권 갖는 당직자 일괄 사퇴 요청”

정점식 정책위의장 자진사퇴 압박
尹, 인선 관련 “당 대표가 알아서 하라”
친한계로 교체 시 친윤 보다 많아져

서범수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이 31일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갖는 당직자에 대해서 일괄 사퇴해달라는 한동훈 당 대표의 의견을 전하며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자진사퇴를 공개 압박했다. 당직 일괄 사퇴 압박은 전날(7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를 만나 당직자 인선과 관련해 “당 대표가 알아서 하라”는 발언 이후 이뤄졌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한 대표가 일괄 사퇴를 요청한 배경에 대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하는 모양새 갖추는게 안 맞겠냐는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1명에 대한 임면권이 있다. 또한 여의도연구원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전략기획부총장·조직부총장), 당 대표 비서실장·정무실장(특별보좌역), 대변인단 등도 인선할 수 있다.

최근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거취를 두고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사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과정에서 나온 이번 결정은 한 대표가 정 정책위의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정책위의장은 친윤석열계의 핵심 인사로 주요 당직을 맡은 바 있다.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당 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정책위의장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친윤석열계 5명(추경호 원내대표, 김재원·원요한·김민전 최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시스

고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인 반면, 친한계는 한동훈 당 대표,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 3명에 당 대표 몫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더해야 4명이 된다. 정 정책위의장의 사퇴 후 친한동훈계 인사로 교체를 하면 최고위 구성에서 친한동훈계가 친윤석열계보다 숫자가 많아진다.

사실상 공개 사퇴 압박을 받은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 추인을 받아야 임명하는 직책인 만큼, 잡음 없이 정책위의장을 교체하는 부분이 관건이다.

서 사무총장은 한 대표가 정 정책위의장을 당사에서 만났다고 확인해줬다. 서 사무총장은 “(정 정책위의장이) 고위당정협의회 때문에 보고하러 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추후 주요 당직 인선에 대해서는 “일괄사퇴서를 받아보고 정리해야하지 않겠냐”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 직후 한 대표 체제에 힘을 싣으며 연일 ‘화합’을 강조하며 당내 갈등 요소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전날 한 대표와의 독대에서 정 정책위의장 유임·교체 여부 등 당직 인선

에 대해 “당 대표가 알아서 하라. 폭넓게 포용해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날 회동에서) 당직 개편과 관련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대통령께서 ‘당 대표가 알아서 하라’고 말씀했다”며 “당직 인선이 마무리되고 지도부가 정비되면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하자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동에서 “당 대표가 됐으니 정치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 사람 저 사람을 폭넓게 포용해서 한 대표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직의 취약점을 강화해서 잘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 대표는 “대통령님 걱정 없이 잘 해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다만 특정 인물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한 대표가 정책위의장을 친한계 인사로 임명하더라도, 친윤계가 반발할 명분이 줄어들었다는 전망이나 온다.

/서예진 기자 syj@

尹, 이진숙 임명 강행… 野 탄핵안 예고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상임위원 김태규 임명
2인체제로 안건이결 불법성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방통위는 2인 체제로 돌아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예고해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일 국회에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재송부를 당일 기한으로 요청했고, 기한이 지나자 이날 오전 지체 없이 임명 수순을 밟은 것이다.

이날 김태규 부위원장까지 임명되면서 방통위는 사상 초유의 ‘0명 방통위’ 사태를 벗어났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 이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해 취임식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중점 과제로 ▲공영방송 공공성·공정성 재정립 ▲미디어·콘텐츠 혁신성장 ▲방송·통신 이용자 주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회적 공익인 공영방송 및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돌아오면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완료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 임명에 즉각 반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이 첫 출근을 하자마자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안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진숙씨는 방통위원장직이 아니라 검찰 수사실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오늘 탄핵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이 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는 즉시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위원장을 포함해 5인으로 구성돼야 하는 방통위가 2명으로만 회의를 열고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탄핵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회의 소집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절차도 무시하고 상식적 수준의 일조차 하지 못하는 방통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내일(1일) 민주당과 야5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한다. 이에 1일 발의하고, 같은날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까지 발의하면서, 윤석열 정부 내 세번째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가 됐다. 다만 이 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에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 기자